

정부, 정책금융 집행 점검... “피해기업 유동성 충분히 공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20% 집행
재정부 ‘수출·수주지원단’ 설명회
수은 ‘중동상황 대응 데스크’ 설치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뉴스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부와 수은은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이달 25일 기준 목표 대비 2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은은 권역별 통합마케팅과 전방위적 고객 면담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은이 피해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에 신속히 대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은과 합

계 중동전쟁 관련 피해기업 및 공급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중동 상황에 대응해 리스크 요인을 정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정부 윈스톱 수출·수주지

원단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수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최근 높은 환율 변동성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에 유연히 대응하고,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윈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유법민부 단장은 “자국 우선주의 및 무역장벽 강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 중장기 사모채, 단기 기업어음(CP) 등을 총동원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 ‘중동상황 대응 데스크’를 설치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 동향과 프로젝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악화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1면 ‘기업 대출금리 상승...’서 계속

올해 회사채 발행 34.5조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3.891%를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약 50.5bp 급등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2.935%에서 연 3.542%로 뛰어올랐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그보다 신용도 낮은 회사채 금리도 따라 오른다. 그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다. 또 채권금리 상승에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지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회사채 발행액은 34조 518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5조 4184억원)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반면 상환액은 같은 기간 29조 2120억원에서 34조 669억원으로 늘었다. 연초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줄인 영향이다. 지난해 1분기 말 3.123% 수준이던 AA-급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1년 새 4.215%(이달 27일 기준)까지 뛰었다. 미국 국채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최근 더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4월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 647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자금 쏠림까지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인 은행채나 특수채로 자금이 몰리면, 부채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돈맥경화’가 재연될 수도 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9일 댄 카츠(Dan Katz)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노사, 위기극복에 집중”... 김정관 장관 ‘휴전’ 제안

김 장관,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 면담
에너지 절약·AI 전환 등 협조 요청



김정관(왼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비상한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위기극복에 노사역량을 집중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며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거대한 위기에 당면했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동계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도 당

부했다.

이날 만남은 한국노총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장관이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건 2006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 공급망 불안, 물류비 및 생산비 상승 등 국민경제와 산업생산에 거대한 위기로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원유·석유 대체 수입선 확보, 공급망 지원센터 가동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 전환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기업을 지키는 것이 곧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AI

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해 일터가 생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석화업계 등 사업재편과 관련해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산업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사업재편과 정에서 고용안정 조치 등 완충장치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노총은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전환 업종 지원 강화와 고용 유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국가지원금 20%



수수료 0원



**노사정이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기금**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1조 6천억원 달성!!

푸른씨앗
홍보모임 김성주


